



14면

"인류 건강 지향하는 글로벌 약학 허브"
전북대 약대비 전선포식 및 현관식

2020년 6월 1일 월요일(음 4월 10일) 제2546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한국판 뉴딜' 도정연계 안팎 뛴다

전북도, 전문가 참여 6개 분야 사업추진단 구성
대형 IT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후속대책 마련 중

전북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실질적인 사업발굴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여 6개 분야 사업발굴에 나섰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및 대규모 국책사업 등 국가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7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사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마련했고,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포함 부처별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국가 전반적인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전북발전 대도약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중이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6월초 정부 부처의 세부 추진방향이 발표될 것에 대해 정부 정책 등장과 파악뿐 아니라 관련 사업의 시급성과 부처별 사업발굴 자료 제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핵심 방향에 맞춰

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실질적인 사업발굴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여 6개 분야 사업발굴에 나섰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및 대규모 국책사업 등 국가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정부의 세부 추진방향이 설정되는 즉시 분야별 세부 사업발굴과 추진조직 확대·구성 등 신속히 정비해,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높은 전북

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사업 반영 추진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는 5G,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CT산업에서도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전라북도민의 특화된 전북판 뉴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정책을 통해 대형 IT 프로젝트 등 우리 전라북도 주요 혁신프로젝트들

와 연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

안을 찾아 전북 대도의 밭장을 확실

히 다져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 특례시 지정 단초 마련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전주시가 사실상 불투명했던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이는 정부가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향후 대통령령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에 전주가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당초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법률안은 오는 6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가 심의를 거쳐 제출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전주가 인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대상에서 빠졌고 그간 충분히 정부지원을 받아온 수도권과 경남권의 고양시·수원시·용인시·청원시의 4개 도시만 혜택을 받았지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같은 해 12월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은 전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꾸준히 촉구하였다. 시민들의 참여도 이어져 지난해 4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등 7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향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김윤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28일 이태원 클럽과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에 대해 추가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첫 삽'

종교역사문화 전시·체험공간

지역 근대 개화를 주도하고 민족운동의 역사에 기여한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의 착공식이 지난달 29일 예수병원 주차장 옆 기념관 예정부지에서 치러졌다.

또한 실무위원회별로 중앙부처 관계자와 협의하여 분야별 최고 전문기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착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사업시행 주체인 전북기독교성지회사

업추진위원회의 원활연 이사장 황인

과 사람 간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했다.

이번에 착공한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은 예수병원 옆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실, 영상관, 의학박물관, 자료실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개화기 기독교 선교를 통해 축

적된 근대역사문화 자원들을 재정비해 근대 개화를 주도하고 민족운동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종교역사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체험공간으로 꾸며진다.

/김진성 기자

전북지역 中企 체감경기 2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

중소기업총동회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전북지역 중소기업경기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PHI)는 2.4p 상승한 84.1로 2개월 연속 소폭 상승곡선을 보였다.

제조업은 정부 등의 내수부양책 마련 등으로 인해 7.2p 상승 반등 했으며, 비제조업의 체감경기는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전산업 전체로는 상승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의 6월 경기전망은 84.3으로 전월보다 7.2p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3.6p 하락한 88.9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8.3p 하락한 75.0로 전망 되었고, 서비스업도 85.0으로 전월보다 3.0p 하락했다.

내수판매(81.3→82.9)와 영업이익(79.4→83.6)전망은 각각 1.6p와 4.2p 상승하였고, 수출전망도(63.6→66.7) 전월대비 3.1p 상승했다. 역계열인 고용수준(103.6→100.8) 전망은 2.8p 하락하여 다소 원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상 기자

경제도약, 정의로운 경제

**미래
창조하는 경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스마트농업 육성